

보도시점 2026. 5. 13.(수) 별도공지(간담회 종료 이후) 배포 2026. 5. 13.(수)

K-조선! 모두의 힘으로, 더 큰 미래로

- 정부-기업-노동자-유관기관 모두 모여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 개최 -
- 미래 조선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및 7대 핵심과제 제시 -

* 3대 전략 : ①K-조선 본진 강화 ②시장 확대 ③상생 생태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5.13(수) 15:50분, 울산 현대호텔에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K-조선 본진 강화, 상생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미래 조선시장 선도전략을 논의하였다. 오늘 간담회는 대·중·소형 조선사, 사내외 협력사, 기자재사, 노동자, 금융기관 등 조선업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K-조선의 미래에 머리를 맞댄 유례없는 자리가 되었다.

<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5.13(수) 15:50~17:00 / 울산 현대호텔 다이아몬드홀
- 참석자 : 정부, 대중소 조선사·기자재사 및 근로자 대표 등 40여명
 - 정부 : 산업부, 재경부, 노동부, 해수부, 금융위 장관
 - 조선사 : (대형)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삼호 대표
(중형) 대한조선, 케이조선, HJ중공업, 대선조선
(소형) 동성조선, 중앙해양중공업, 디섹, 삼원중공업 대표
 - 기자재사 : 세진중공업, SB선보, 한라IMS, 강림중공업,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대양전기공업, 마린웍스 대표
 - 협력사 : 동형이엔지, 명진TSR, 건우테크, 오리엔탈정공, 대원산업, 성원산업 대표
 - 금융기관 :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회장

토론에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K-조선 미래비전 : 모두의 힘으로, 더 큰 미래로」를 발표하고, ①본진 강화, ②시장 확대, ③상생 생태계의 3대 추진전략으로 앞으로도 세계를 선도하는 K-조선을 이루어내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 「K-조선 미래비전 : 모두의 힘으로, 더 큰 미래로」 주요 내용 >

해양패권 경쟁,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여건이 급변하면서 세계 교역량의 90%를 담당하는 선박, 그리고 이를 건조하는 조선산업의 전략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26.2월 「해양행동계획(Maritime Action Plan)」을 제시하고 투자 확대, 동맹국과의 협력 등 조선업을 재건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신규조선소 투자와 해운-조선간의 밀착을 통해 “해양굴기”를 실현 중이다. 한때 세계 조선업 1위 국가였던 일본 역시 10년간 1조엔을 투자하여 건조역량을 2배로 확대한다는 「All Japan 2035」 계획을 추진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어려운 시기를 딛고 다시 일어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6년 1분기 전세계 발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약 1.5배로('25년 1분기 1,325만CGT → '26년 1분기 2,020만CGT) 증가하였으며, 미국, 인도 등 국제적인 협력기회도 확대되는 등 K-조선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쟁국의 공격적 설비 확장과, 저렴한 인건비에 더한 기술 추격 등으로 수주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이다. 안으로는 대형사 대비 중소형 조선사들의 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가운데, 20만명에 달하던 조선산업 종사 인력도 10년 사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지속가능한 산업기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이제 몇 개 대형 기업만 잘해서는 글로벌 조선시장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문제인식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정부-기업-노동자-유관기관 등 모두의 힘을 모아 세계를 선도하는 K-조선을 만들기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전략① **본진 강화 : 세계 최고의 생산역량을 갖춘 K-조선**

(과제① : 필수선박 국수국조) 국내조선사들이 고부가 선별수주에 집중하면서 자동차운반선, 벌커선, 소형 컨선 등 안보물자 수송에 필수적인 선박들의 해외 의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선-해운업계는 지난 4.28 '조선-해운 상생협의회'를 출범하고 해운사 공동발주 등 양 산업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LNG 등 에너지운반선, 해상풍력지원선 등 자원·에너지 연관 선박은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국내 발주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과제② : 7 Star-Ship 프로젝트) 5년간 최대 5,250억원을 투자해 우리 조선 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7개 선종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❶LNG운반선, ❷암모니아선, ❸수소운반선, ❹액화CO2 운반선 등에 대해서는 각 선종에 특화된 화물창 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특히, LNG 화물창에 대해서는 그간 소형선에 대해서는 기술 실증이 이루어진 바, 대형선(174K 이상)에 대한 실증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또 다른 친환경선박인 ❺전기추진선은 대형 추진기술 자립화 R&D 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북극항로 개척으로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❻해상풍력지원선과 ❼극지쇄빙선에 대해서는 한국형 독자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과제③ : AI 전방위 확산) '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약 1조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초로 24시간 자율운영이 가능한 AI 조선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설계(디지털 트윈), 생산(피지컬 AI), 운영(최적화 플랫폼) 등 조선소 공정 전반에 대해 AI를 적용한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조선소 야드에 폭넓게 적용시켜 조선소 생산성을 공정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이다.

또한, 올해부터 7년간 최대 6,300억원을 투입해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필수적인 실선운항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IMO Lv. 4 단계의 완전 자율운항 기술을 개발한다. 정부는 산업부·해수부가 공동 주관하고 조선사·해운사 등 47개 기관이 참여중인 M.AX 얼라이언스 자율운항분과를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 수요를 확인하는 한편,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IMO 등 국제표준에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반영해나갈 방침이다. 데이터 수집, 위치정보 활용 등 불명확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략② **시장 확대 : 글로벌 조선동맹으로, 시장을 더 크게**

(과제④ : K-Shipyard Alliance) 인도, 베트남, 필리핀, 사우디 등은 한국과 조선협력에 관심이 크고, 자국 조선업 육성의지가 높은 국가들이다. 이러한 국가들에 우리 기업이 전략적으로 진출하여 조선소 건설, 숙련인력 양성, 생산성 진단 등 우리 조선업이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 K-조선의 기술을 이식받은 '조선 동맹'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상기 동맹 조선소들과는 국내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범용선박을 중심으로 건조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기자재와 설계는 한국에서 지속 수출한다.

* 해외진출 사례 : ❶ (인도) 타밀나두주 조선소 건설 협력 MoU('26.4), ❷ (필리핀) 수빅조선소 건설('09) 및 인수('24) ❸ (베트남) 현지 조선소 확장 투자('25~) 등

(과제⑤ : MASGA 프로젝트) 작년 8월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가 되었던 MASGA는 올해 본격적인 협력성과 발굴에 주력한다. 정부는 조선소, 인력, 생산성 등 미국 조선업 기반을 재건하는데 협력하면서도 **우리 건조일감과 기자재 수출 등으로 환류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발굴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5.9 산업부와 상무부간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조속히 설립될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통해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성과창출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전략③ **상생 생태계 :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K-조선**

(과제⑥ : 인력양성)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3사가** 올해 직영 인력을 전년 대비 **20% 이상 더 채용하는 등** 앞장선다. 정부 역시 현장·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령의 퇴직자들의 경험을 전수하는 「OJT 아카데미」를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등 ‘30년까지 1.5만명의 전문·숙련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23.4월~’25년) 조선업 별도 E-9 쿼터를 제조업 전체로 통합 관리하고, E-7 쿼터에 대해서도 합리적 조정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인력의 조선소 등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근로자에 대해 자산형성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광역이음 프로젝트**’를 운영(’26~)하는 한편, 정착비·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공동근로 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정부 매칭*을 확대한다.

* 원청-협력사-정부 등 공동 조성 : 원청 30억원 이상 출연시, 정부 최대 20억원 지원

(과제⑦ : 중소조선-기자재-협력업체 상생) 高신용 대형사는 상대적으로 원활하나, 중소형사는 아직도 **선수급환급보증(RG : Refund Guarantee)**의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정부는 **시급한 수요에 대해서는 정책 금융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지표와 사업성·잠재력을 균형있게 고려한 지원 체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형사 등에 납품하는 협력사들의 금융수요도 상당하다. 금일 간담회 이전, 대형조선 3사(HD현중-한화오션-삼성중)와 시중은행 3사(하나-우리-신한)가 **조선 협력업체에 1조원 우대대출을 지원하는 ‘상생 무역금융 협약’**을 체결한 바, 정부는 상생금융의 실질적 성과가 확산되도록 지속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조선사들은 ‘**원-하청 동일비율 성과급**’ 등 협력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조도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금융 이상으로 중요한 작업안전과 관련,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조선소,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정부는 유해가스 감지기, AI기반 충돌방지 시스템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안전장비들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사들 중심으로 협력업체 안전교육 시설을 확대하는 등 안전한 조선소를 만드는데 민관이 함께 노력해나간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400여년 전 한산도대첩의 승리비결처럼, 글로벌 수주경쟁 상황에서, 우리 K-조선도 **■견고한 본진, ■혁신적 전략, ■튼튼한 전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앞으로의 경쟁은 기업간 경쟁을 넘어 ‘생태계’간의 경쟁인 만큼 여기 계신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일 약속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 K-조선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K-조선 미래비전 : 모두의 힘으로, 더 큰 미래로」 발표자료

담당 부서 < 총괄 >	산업통상부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이디도 (044-203-4330)
		담당자	서기관	염현호 (044-203-4331)
			사무관	홍길표 (044-203-4334)
			사무관	이영종 (044-203-4336)
			사무관	김지훈 (044-203-4333)
			사무관	허은재 (044-203-4335)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원배 (051-773-5710)
		담당자	사무관	명수한 (051-773-5718)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책임자	과 장	어일천 (044-202-7220)
		담당자	서기관	박득영 (044-203-7214)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오태석 (02-2100-2863)